다산포럼

위험사회와 민주주의의 역설

윤 지 관
덕성여대 영문학과 교수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의 태양은 솟았지만 '희망'이니 '기대'를 말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너무 어둡다. 오랜 고통과 힘든 싸움 끝에 이룩한 민주주의의 수준이 최근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마저 억압받는 지경에는 군부독재의 잔영마저 어른거린다.

민주주의의 퇴행은 정치 차원만이 아니라 경제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중간층의 몰락으로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세월호 침몰의 처리 과정이 여실히 보여주듯, 집권 세력은 진상을 밝히고 국민의 안녕을 보살피기보다 기득권 보호에만 골몰한다. 대다수 국민은 극도로 악화되는 노동조건 속에서 살벌한 생존경쟁의 현장에 방치된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험사회가 되고 있는 징후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일촉즉발의 무장상태로 대치 중인 남북은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팽개친 지 오래다. 전 국토를 오염시킬 위험을 안은 노후 핵발전소가 멈추기는커녕 원전 중시 정책은 더 강화되고 있다. 탈핵과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돌린 서구의 추세와는 정반대다. 무리한 부양책으로 경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빚더미에 올라 있고 학문의 전당인 대학 캠퍼스조차 위험 공간이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자율성이 생명인 대학을 얼마나 옥죄었으면 국립대의 중견 교수가 대학민주주의를 외치며 본부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겠는가?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로 암울한 한국사회에 대한 분노와 조소를 쏟아 낸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여기에는 지금 이곳이 희망이 사라진 고통과 좌절의 장소이고 마치 봉건왕조와 같은 신분사회라는 냉소가 실려 있다. 한겨레신문 신년호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이 '최근 한 달 사이 가장 자주 느낀 감정'은 무기력(26.0%), 무감각(13.5%), 좌절(13.0%) 순이었다. 활력이 상실된 죽은 사회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헬조선'의 기원을 따지기는 쉽지 않지만 이 절망의 정서가 청년층에 광범하게 자리 잡은 근저에 사회 양극화와 공고해진 기득권 구조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지옥과 같은 상호 경쟁을 부추기는 수구 정치세력이 그 동인(動因)이라는 점도 그렇다. 결국 극우에 가까운 보수정권이 연이어 집권한 탓에 그동안 어렵사리 이룩한 소통과 나눔의 공간이 무너짐으로써 한국사회는 비탄과 분노가 들끓는 아수라장이 된 것이다.

그러나 통탄스러운 것은 이 모든 '헬조선'이 다름 아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기득권을 수호하는 보수정권을 선택한 것도 이를 유지시켜 온 것도 결국 국민이란 이름의 선거권자인 것이다. 물론 현 정권의 탄생부터가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을 위반한, 국가정보기관을 선거에 동원하는 불법을 저지른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불복'이라는 레테르가 그 모든 문제 제기를 함구시키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선택을 되돌릴 힘이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것일까? 민중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틀로서의 법과 제도는 권력의 '보존적 폭력'은 보장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폭력'은 허용하지 않는다. 물리적 수단으로서의 혁명이 불가능한 민주사회에서 국민이 권력을 창출하는 수단은 선거밖에 없다. 다가오는 총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 때문이며,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한 제1야당의 분열도 시민들을 변화의 주체로 불러내는 기획의 일환이 될 수 있다면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다.

'헬조선'의 분노와 좌절감이 자칫 정치 무관심이나 냉소주의로 귀결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선거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로는 현 집권세력도 마찬가지인 까닭에 청년들이 탈정치화되는 것이야말로 이들이 원하는 바다. 선거가 '헬조선'을 만들어 낸 기계장치라면 그것을 벗어날 길도 바로 그 선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현실정치가 실망스럽더라도 선거를 외면하면 결국 '헬조선'은 우리의 '불가역적'인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굴레이자 업보다.

NGO 칼럼

'위안부' 굴욕 회담, 즉각 무효화해야

이 국 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최일례(101) 할머니가 만주로 끌려간 것은 열여섯 살 때인 1932년이었다. 영암군 금정면 한대리에서 태어난 할머니는 어느 날 물동이를 이고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동네 우물에 나갔다가 군복을 입은 일본인에 붙잡혀 트럭에 실리고 말았다. 군인들은 거쳐 가는 길마다 여자들을 잡아왔고 그렇게 해서 모인 여자들이 30명 정도였다.

할머니는 그곳 만주에서 '하루코'라는 일본 이름으로 13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노예가 되어야 했다. 나중에는 아편중독자가 되었는데, 고통과 괴로움을 잊기에는 아편만 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비록 몸은 망가졌어도 뒤늦게 죽더라도 부모님 계시는 고향으로 가 묻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편 생각이 날 때마다 아편 대신 술을 대하게 됐고, 담배까지 배웠다고 한다.

해방 후 고향에 돌아와 보니 고모가 끌어안고 마냥 우시기만 하더란다. 그새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만 찾으셨다고 한다. 결혼 생각도 있었지만 병원에서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듣고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할머니는 아무한테도 이런 일을 털어놓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엮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2'(1997년·한울)에 소개된 최일례 할머니의 사연 중 일부다. 증언록은 집단적 광기 아래에서 일제와 일본군이 이 땅의 여성들을 파탄시켰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지난달 28일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과 아베 총리의 내각총리로서의 사과 표명,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10억엔의 정부예산을 지출한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합의한 발표 직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피해자와 국민에게 이해를 구했다.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것이다.

협상도 상대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원칙이 있다. 즉, 도의적 책임 정도면 되는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명백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을 도의적 차원으로 끝내도록 한다면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누가 누구한테 이해를 구할 사안이 아니고, 명백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기시다 외무상은 "법적 책임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마무리됐던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국가 배상이 아니다"고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상 결과는 극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울분을 못 이겨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고, 일본정부는 "우리가 잃은 것은 10억엔 뿐"이라며, 앓던 이를 뺀 표정이다. 일본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정부가 소녀상 이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벌써 으름장이다.

특히, 일본정부가 밝힌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 것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데 이어,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는 것까지 약속한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다.

무릇, 백번 사죄가 부족하다면 백 한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죄의 태도이다. 단적으로, 피해자의 입을 봉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사죄'는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해괴망측한 짓이다. 사죄할 사람이 오히려 매를 들고 큰소리치고 있으니 이것이 굴욕외교 아니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자. 애초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자고 한 협상 아니었는가. 결국, 무효화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기 고

광주의 세 가지 글로벌 의제와 관리 능력

류 재 한
전남대 불어불문과 교수·아시아문화학회장

프랑스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Guy Sorman)은 "미래에도 독자적이고 보편적인 문화를 소유한 국가나 사회가 발전을 주도할 것이며, 이 경우 문화가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각 국가와 도시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와 예술을 활용하는 데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각 도시들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와 더불어 도시의 경쟁력과 브랜드를 제고하는데 문화도시 프로젝트를 활용하고 있다.

광주의 세 가지 글로벌 아젠다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동아시아문화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프로젝트도 바로 이 경우에 속한다.

광주는 글로벌 의제를 선점하는 데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도시이다. 짧은 시간 내에 T/F팀을 구성하여 발빠른 대응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탁월하다. 하지만 문제는 사후 관리능력이다.

먼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짚어보기로 하자.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은 광주의 미래를 밝혀 줄 등대와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전당의 개관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전당의 안과 밖의 사업을 나누어 진행해 오다 드러난 문제를 그대로 노정하게 되었다. '전당의 설립과 운영은 국가의 몫이고 전당 밖의 사업인 문화적 도시환경조성사업 등은 광주가 담당해야 한다'고 특별법에 명시한 것은 족쇄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전당의 안과 밖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3년 유럽문화수도였던 프랑스 마르세유는 국책사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미루기'가 없었다. 우리의 문화전당과 유사한 유럽지중해문명박물관(MUCEM) 건립은 마르세유 구도심의 재생(문화예술을 활용한 재생)과 '함께' 이루어졌고,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이 범죄의 도시로 낙인찍혔던 마르세유를 꼭 방문해야 하는 세계 도시로 변모시킨 원동력이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문화도시의 문제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 1년 동안 국가별 개회 이벤트와 폐회 이벤트, 한중일 3개국의 공동사업(공동제작공연, 전시회 등), 핵심기간(1개월 정도)을 준비하여 집중적인 문화예술 관련사업(특히 현대예술문화와 전통문화, 그리고 다채로운 생활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이벤트 등)을 실시하자는 느슨한 합의 외에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했던 점은 대단히 아쉬운 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문화도시 광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광주는 지금과 같은 느슨한 형태의 교류가 아니라 역동적이며 창의적인 교류에 나서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 글로벌 의제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는 문화적 다양성에 바탕을 둔 국제도시 간의 연대 사업이다. 광주는 2014년 12월 1일에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되었고 가입과 동시에 광주는 도시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과 창의성을 계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서울회의에서 앞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원하는 도시들은 광주의 열정을 배우라고 했다. 이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가입을 위해 쏟았던 광주의 열정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광주는 의제를 점하는 데는 뛰어나다. 하지만 그 의제를 관리하고 다른 의제와 접맥시키는 통합적인 관리 능력은 부족한 편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문화관련 세 가지 글로벌 의제의 관리와 연계의 결과물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동아시아문화도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라는 글로벌 의제를 갖기 위해 열정적으로 준비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 글로벌 의제가 광주 문화계의 지형도를 바꾸고 광주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핵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관리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지금 광주가 안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문제(문화시설 확충,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 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 능력 등등)와 문화산업의 문제를 이 세 가지 글로벌 의제 안에서 풀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동아시아문화도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의제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세 가지 글로벌 의제가 지역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위해서이다.

더불어 세 가지 글로벌 의제를 광주 안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소통공간의 창조와 끊임없는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바로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응원을 얻어야하기 때문이다.

社 說

이상고온 작물 피해 심각… 정부 재해 보상을

한겨울인데도 최근 낮 기온이 영상 10~15도를 오르내리는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남 지역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신안군 비금·도초도 지역의 시금치 재배 농가들은 잦은 비와 이상 고온으로 극심한 고충을 겪고 있다. 신안 시금치는 찬 서리를 맞고 배수가 원활해야 상품가치가 높아지지만 많은 비와 고온으로 재배 면적 1057ha 중 74.1%인 783ha가 피해를 입어 농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미 파종한 보리와 마늘이 웃자라고 양파는 토양의 습기 때문에 수확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장흥의 표고버섯 재배지에서는 70%의 농가가 습해로 아예 수확을 포기했다. 비닐하우스 딸기는 높은 기온으로 난방비가 덜 드는 이점이 있지만 큰 일교차와 급격한 기온 변화 등으로 적정 온도를 맞추지 못해 품질과 출하량 저하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루한 가을 장마 때문에 곶감농가는 이미 한 해 농사를 망쳤다. 전남의 경우 생산 계획량 3600t의 46%인 1660t이 곰팡이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소규모 영세 농가에 온풍기와 전기난로, 건조기 등 700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및 시·군비 보조금 5억 원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상기온 현상은 각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농업은 절대적이다. 노지 작물은 생육에 직접 차질을 빚고 피해 농경지도 광범위해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재해로 규정해 영세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관련 당국은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선거구획정위 의사결정 구조부터 바꿔야

'선거구 없는 나라' 상태가 닷새째 지속되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지난 연말을 넘김으로써 지난 1일 0시부터 전국 246개 선거구가 법적으로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가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참담한 신세가 됐다. 4·13 총선의 정통성이 뿌리째 흔들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결국 국회를 상대로 법적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5개월 전인 2015년 11월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기에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제한이 계속될 경우 총선 후에도 선거가 불공정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낙선한 정치 신인들이 현역의원들과의 현격한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고 가장 먼저 법을 준수하는 기구임에도 이렇게 초법적인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은 국민에게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다"면서 "무책임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획정위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총 9명의 위원 중 여야 측 위원이 4대4로 팽팽한 데 반해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라 애초에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야 추천을 3명씩으로 줄이고 나머지 3명은 선관위에 추천권을 돌려줌으로써 합리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획정위의 의결정족수도 과반수로 바꿀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반달가슴곰

지난 1997년 11월 환경부는 녹색연합 및 구례 지리산생태보존회 등과 함께 반달가슴곰 생태조사를 실시했다. 일본 반달가슴곰연구소에서도 참여했다. 당시 멸종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던 천연기념물 329호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에 살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였다.

기자도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생생한 모습을 앵글에 담겠다는 포부를 안고 조사단에 동행했다. 그 이전에 지리산에서 사는 야생 반달가슴곰이 공식적으로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1978년 9월이었다.

조사는 서식 가능성이 큰 지리산 몇 개 구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기자가 포함된 조사단은 우선 4륜 지프로 구 벽소령 횡단도로를 따라 오른 후 아래쪽으로 울창한 숲 속을 헤치고 걸어 내려오며 반달가슴곰의 자취를 꼼꼼하게 찾았다.

지리산 지리에 밝은 보존회원들은 짐승들이 다니는 통로를 금세 알아챘다. 짐승의 배설물 냄새를 맡고 심지어 혀에 살짝 찍어 확인하는 일본 곰 전문가들도 있었다. 그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마을에 돌아오기까지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다. 허탈했다.

다만 다른 구역에서는 이끼가 낀 바위에서 미끄러진 자국이나 나뭇가지를 꺾어 놓은 흔적들이 일부 발견돼 반달가슴곰이 멸종하지 않고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환경부는 10마리 이상의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해 9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포획한 3년생 수컷 새끼 반달가슴곰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파악되지 않은 개체로 확인됐다. 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러시아와 북한에서 반달곰을 도입해 지리산에 방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아빠 곰은 2005년 방사된 러시아산으로 파악됐으나, 엄마 곰은 기존 반달곰의 유전자 DB에서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어 방사한 곰이 야생에서 낳은 '자연출산 1세대'로 보인다. 그리고 새끼 곰은 지리산에 방사한 어미 곰이 낳은 '3세대'(손자)로 추정된다고 한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생존의 방식을 터득한 야생동물의 모습이 신비롭기만 하다.토종들도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